

# “수업시간 줄면 위안부”...인권침해 만연

### 정신병원 강제 입원·언어폭력·성폭력·체벌 포함 매년 4천여건...광주인권사무소 사례 발표회 눈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수업시간에 줄면 위안부...’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경찰·병원·다수인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하는 인권침해사례발표회를 가졌다. 2005년 10월 4천건에 달하는 등 인권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10일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지역 인권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2005년 10월 개소한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해 말까지 모두 6만7천617건의 진정과 상담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해마다 인권침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4천774건의 진정, 상담, 안내·민원 등을 처리했다. 인권침해 상담 대상 기관은 보호시설이 49.6%로 가장 많았는데, 광주인권사무소가 꼽은 주요 인권침해 사례도 보호시설 중 하나인 정신병원에서 나왔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환자를 신체를 때리고, 탁

구제로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환자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병원장에게는 징계 조치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광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쌍꺼풀 수술 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건’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 양육시설 원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시설 측이 다른 아동들도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지자체장에게는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광주 교육계에서도 차별 사례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시 성적기준 우선 선발을 차별로 판단, 광

주시교육감에게 제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92건의 학생 인권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언어폭력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징계도 84건, 체벌 7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 중에는 모 학교 역사 시간 독어 문제를 수업하던 교사가 조는 학생에게 “그렇게 졸다가는 위안부가 된다”고 말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아이들이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교사는 욕설로 되받았다.  
 다른 학교 교사는 동성애 수업을 하던 중 “성폭행은 여자가 문제니까 일어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체벌 사례 중에는 방과 후 스포츠 시간 강사가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에게 1천400원 앓았다 일어하기를 반복하게 해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주저앉기도 했다. 한 학교에서는 당구대가 부러질 만큼 학생의 발바닥을 때린 교사와 수시로 학생들의 신체를 꼬집는 교사 사례도 접수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인권침해 사례도 잇따랐다. 광주비정규직 지원센터 실태 조사 결과 여성 임금은

남성의 58% 수준에 불과했으며 동종유사업종 정규직과 비교해 73.5%에 그치는 등 임금 차별도 심각했다.  
 2명 중 1명(50.1%)은 산재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출산하고도 휴가를 못하는 등 모성보호 휴가차별 비율도 53.9%에 달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해 646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성폭력 관련 내용이 6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도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현대판 노예 청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주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여성상담센터 측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남편의 학대와 폭행을 겪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의 인권침해 요소를 되짚었다.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548건의 신고접수 사례 중 경제력이나 보호자가 없어 병원치료를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산간 지역이나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시행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 오늘의 날씨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10-20	목포	08:57	01:23
목포	10-20	순천	21:26	14:39
여수	10-20	여수	04:01	10:33
			16:53	22:46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의술 약속도 좋아요)
- 빨래 70 (빨래 잘 마르는 편)
- 세차 90 (새봄계 단장해 보세요)
- 운동 70 (준비운동은 항상 추천해)



**올해 첫 개방한 무등산 정상** 올해 처음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11일 수많은 탐방객들이 정상에서 산행을 즐기고 있다. 이날 개방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양봉과 인양봉을 관망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으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 ‘공천 대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법원, 선거법·채용 청탁 인정**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준 4억5천만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징역 2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승지기자

## 잇따른 가동중단 사고 한빛원전 부실한 점검 아니냐 비판 목소리

**화재도 이어져 대책 시급** 하루 만에 가동이 멈춘 것이다.  
 원전 측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한빛 1호기를 정기 점검하고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을 위한 시험 중이었다.  
 당초 이날 오전 다시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원인 조사, 안전 점검 등을 거치면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가동 중 주 변압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발전이 정지한 한빛 5호기는 정기 점검을 하다가 장비 불시작을 겪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고는 외부 송전선로에 낙뢰가 떨어져 순간적으로 송전탑을 통해 대지로 흐르는 지락전류 영향으로 주 변압기에서 보호 신호가 작동하면서 일어났다.  
 점검 중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 3월 한빛 1호기 격납건물 내 증기발전기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사이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차가워진 상태였다.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예전보다 2-3배 점검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문화되지 않은 정비 인력 문제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무인 셀프계산대 유도위해 이마트, 고객 대기 줄 늘려”

이마트가 고객들의 무인 셀프계산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고객 대기 줄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무인계산대를 도입한 뒤 일반 계산대를 다 열지 않고 있다”며 “투입 가능한 인력이 있는데도 고객 대기 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배치보다는 명목으로 계산원들을 다른 점포로 발령하는 등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개인화·소량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무인계산대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철현기자

## 광주 학교 친일잔재 청산 ‘첫 성과’ 나와

**광덕중·고 새로운 교과 교체 완료...오늘 개교기념식 제창**  
 광주 광덕중·고등학교가 친일작자가 만든 교과를 교체해 광주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첫 성과를 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광덕중·고교에 따르면 지난 1월 친일 음악가 김성태에 의해 교과가 작곡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교과 교체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이후 4개월간에 걸친 작업으로 탄생한 새 교과는 광덕고 음악 교사로 재직 중인 최재훈 성악가가 작곡했다.  
 새 교과는 13일 오전 11시 교내 비전홀에서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 처음 제창된다.  
 단체 신채호 선생 후손이 설립한 광덕중·고는 그동안 경술국치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와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인식 고취에 앞장서 왔다. 2012년엔 일본의 욕일기 행사를 한 학교 엠블럼

## 혁신도시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설립 난항

**교육단체 반대 입장 줄이어...전남교육청 대략 난감**  
 교육 시민단체가 전남도교육청이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와 연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정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설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월성 교육’에 부정적인 추세로 인기가 여의치 않은 데다가 교육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도교육청은 난감해 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에너지 과학영재학교는 한전공대 개교 예정 시기인 2022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전남도, 나주시와 기획단(TF)을 구성해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획상 과학 영재학교는 12학급, 180명 규모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8개, 영재학교 2교인 영남권과 비교해 호남권은 과학고 2개, 영재학교 1개에 그치고 한전공대가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려면 역량 있는 인재를 공급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표적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 분야 영재를 양성해 졸업생을 가급적 한전공대에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설립비 마련, 교육부 설립 인가 과정에서 난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경우지로 변질하는 현상 탓에 차츰 일반고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수월성 교육 방침에 포괄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단체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과학 영재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로 사교육비 증가, 초등·중학생 입시경쟁을 부추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공대 입학 특전, 과학 영재학교 신입생 할당, 한전공대 연계 특목고 졸업자 특별전형 등 검토된 방안들은 일반 학생 차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앞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보다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한전공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고, 한전공대 성공을 위해서는 특화된 인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하다”며 “특목고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과학 영재학교는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